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동동 344-22 한광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8년 9월 27일 목요일 (음 8월 18일) 제2137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중전선언 언제든 취소 가능”

문 대통령, 폭스뉴스 인터뷰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사진)이 25일(미국 현지시각) “중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며 중전선언을 꺼려하는 미국 조야(朝野)의 인식 변화를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미국 뉴욕의 한 호텔에서 진행된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설령 제재를 완화하는 한이 있더라도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어길 경우 제재를 다시 강화하면 그만”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비핵화 약속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사이에 크게 타임테이블의 어떤 약속을 한 후에 그에 대해서 상대측의 약속을 신뢰하는 토대 위에서 이를 전개시켜 나간다면 미국으로서 손해를 보는 일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이에 상응하는 미국의 조치 사이에 접점을 찾아 어떤 식으로든 우선적인 북미간 비핵화 협상을 빨리 재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내 보수진영을 상대로 일종의 중전선언에 대한 문턱 낮추기를 시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취해야 되는 조치들은 핵실험장을 폐기하는 것이고, 미사일 실험장을 폐기하는 것이고, 영변의 핵기지를 폐기하는 것이고, 또 다른 기지들을 폐기하는 것이고, 만들어진 핵무기를 폐기하는 것”이라며 “이른바 불가역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그에 대해서 미국과 한국, 양국이 취하는 조치는 언제든 지 재개할 수 있는 군사훈련을 중단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의 비핵화는 한 번 폐기하면 돌아갈 수 없는 불가역적인 조치에 해당하지만, 그에 상응하는 한미의 조치는 군사훈련 중단 등 언제든지 재개할 수 있는 가역적인 것으로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북한의 체제안정 보장 조치라곤 하지만 정치적 선언에 불과한 중전선언도 언제든지 반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거부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게 문 대통령의 발언 속에 녹아 있다. 중전선언이라도 최대한



“중전선언 최단 시간 내 바람직... 남북미 공감대 검증이 가능한 비핵화 미국 상응조치 속도 달려”

빨리 이뤄져 북미간 비핵화 협상이 원활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게 문 대통령의 인식이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에 상응하기 위해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여러 조치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은 상응 조치라 하는 것이 반드시 제재를 완화하는 것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우선은 중전선언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인도적인 어떤 지원을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도 있으며, 예술단 교류와 같은 비정치적인 교류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변 핵기지를 폐기하게 되면 미국 측에 잠기간의 참관이 필요할 텐데, 그 참관을 위해서 평양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면서 “이제는 적대관계를 청산한다는 미국의 의지도 보여주면서 참관단들이 머물면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핵화 조치가 완료되고 나면 북한의 어떤 밝은 미래, 그런 것을 미리 보여주기 위해서 예를 들면 경제시찰단을 서로 교환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며 “반드시 제재를 완화하지 않더라도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북미관계를 새롭게 수립한다라는 것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문제는 북한이 어느 정도 진지한 핵폐기 조치를 취할 경우에 그 이후에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어느 정도 속도 있게 해 주느냐에 달려있다”며 “미국이 속도 있는 상응 조치를 취해 준다면 북한의 비핵화 조치도 보다 속도를 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하면 할수록 미국 측에서는 북한이 핵을 내려놓더라도 북한의 체제를 보장해 줄 것이며, 북미관계를 새롭게 만들어 나갈 것이라는 믿음을 줘야 한다”며 “그 믿음을 북한에 줄 수 있다면 북한은 보다 빠르게 비핵화를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렇게만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1차 임기 내에 비핵화를 마치겠다는 북한의 타임테이블도 결코 무리가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미국이 북한에 너무 많은 것을 양보하는 것에 대해 우려가 미국에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 “지금까지 몇 번의 비핵화 합의가 실패를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의 비핵화에 관해서도 회의적인 분들이 많이 있고, 과연 북한이 약속을 이행할 것인가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분들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이번의 비핵화 합의는 과거의 비핵화 합의와 전혀 다르다”면서 “사상 최초로 미국의 대통령과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직접 만나서 정상회담을 통해서 합의하고, 전세계에 약속한 것으로 그 책임감과 구속력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로 얻을 수 있는 남북미 3자간의 공통된 이해관계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은 비핵화가 완료되어야만 경제 제재가 완화돼서 어려운 북한 경제를 살릴 수가 있다”며 “또 트럼프 대통령으로서 이 비핵화가 완료되어야 지금까지 누구도 하지 못했던 북한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아주 위대한 업적을 거둘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저로서도 북한의 비핵화가 완료돼서 경제 제재가 풀려야만 남북 간에 본격적인 경제 협력이 가능하다고”며 “그것은 역시 또 어려운 데 놓여 있는 우리 한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진성 기자

추석연휴 끝, 다시 일상으로... 귀경 열차에 오른 사람들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26일 전주역에서 명절을 보낸 귀경객들로 장내가 북적이고 있다.

남원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가속도’

김태년·이춘석 의원 등 국회의원 22명 법안 발의 의료 공공성 등에 큰 기여

남원에 설립되는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출범이 관련 법률안 발의를 통해 한층 더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태년, 이춘석, 유성열, 김광수, 정운천, 이용호 의원 등 22명의 국회의원들은 최근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근거 법률안을 공동발의했다.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은 그동안 전북도와 남원시, 전북 정치권이 서남대 폐교 대안으로 청와대를 비롯해 정부부처, 국회 등에 강력하게 요구해 온 사안으로 당·정 협의를 통해 남원 설립이 확정됐다.

당·정 협의 이후 교육부에서 대학 설립심의위원회를 열어 4년제 의과전

문대학원 학제를 골자로 한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안을 심의·의결해 국립공공의료대학은 의과전문대학원으로 최종 확정된 상태다.

보건복지부에서는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출범을 위해 법률이 연내 제정되면, 2019~2021년간 대학 설립 계획 수립, 건축설계 공사를 거쳐 2022년 개교로 본격적인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시작할 계획이다.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가칭)은 공공의료대학원 설립목적 및 형태, 대학원 운영방법, 공공의료인력 양성 및 지원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국가는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등 교육경비를 지원하며,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졸업하고 의사 면허를 부여받은 사람에 대해 10년간 의무복무, 의무복무기관 배치절차, 근무지역 변경절차 등의 세부내용을 담고 있다.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은 지방의 의료인력 부족이 지속돼 의료 공백이 발생하고 있고, 최근에는 응급·외상·감염·분만 등 국민의 생명·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필수 의료 인력 확보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 공공성과 취약지역 의료서비스 제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남원의료원이 국립공공의료대학원 교육병원 역할을 수행하게 되면 전북과 전남, 경남 등 지리산 권역의 의료 취약지역 주민에게 안정적인 필수 의료 및 향산원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송하진 도지사는 이와 관련 “남원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은 서남대 폐교 대안으로 결실을 맺은 사안”이라며 “연내 법률제정이 이뤄지면 2022년 정상 개교를 위해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문 대통령, 위안부 화해치유재단 사실상 해체 선언

문재인 대통령은 25일(미국 현지시각)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에게 “위안부 할머니들과 국민 반대로 화해치유재단이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고 고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사실상의 재단 해체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미국 뉴욕의 한 호텔에서 열린 아베 총리와와의 한·일 정상회담에서 아베 총리가 위안부 문제와 강제징용자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자 이렇게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뉴욕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12·28 위안부 합의를 파기하거나 재협상을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국내적으로 화해치유재단의 해체를 목소리가 높은 현실을 아베 총리에게 전달하며 “지혜롭게 매듭을 지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김진성 기자

세계를 향해, 시민과 함께

찬란한 **전주시대**를 열겠습니다

한바탕 전주